

# “경제보복 일삼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광복’ 위한 적극 정책 마련을”

### 최영규 도의원, 5분 발언서 “도내 우수 인재 위한 ‘탕평 정책’ 시너지 효과내야”

최근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완전히 자립하는 ‘기술 광복’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나는 행보를 발 빠르게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 등 ‘극일(克日)열풍’을 뛰어넘어 도가 재빠르고 현명한 안금 조절로 어설피게 칼을 빼든 일본의 행태에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최 의원은 “기회는 이때”라면서 “이번 경제보복을 전환점으로 삼아 일본 의존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일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타격을 받은 반도체 관련업체가 대기업 2곳, 중소기업 10곳 총 12곳으로, 이중 3곳

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도내 반도체분야 수출액은 1억4100만 달러로 도내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경제보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일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신소재와 탄소 섬유까지 수출을 규제할 계획으로, 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영규 의원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물자이자 일본의 견제에 맞서 독립해야 할 전략산업이 벽

에 부딪혔다”면서 “‘기술 광복’의 시대를 도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도내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면서 “이 인재들을 위해 탕평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인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한데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자원과 작은 땅덩어리와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최영규 의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약해지면 언젠가 또 당하게 된다는 굳은 의지로 전북도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왼쪽부터 김희수, 박용근, 황영석 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이병철, 조동용 의원)

## 우수의회정활동 ‘결실’ 맺다

### 이병철 도의원 등 6명 ‘우수의회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이병철(전주5) 김희수(전주6), 조동용(군산3), 문승우(군산4), 황영석(김제1), 박용근(장수)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7회 우수의회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회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의회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 지방자치 주민참여기반을 확대하는데 앞장서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수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산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와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살피는 조례 제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예산 투명성 확보와 효율화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기

반 구축 활동을 펼쳤다. 지자체가 화학사고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연구단체인 ‘평화통일실현 및 자치분권 향상을 위한 연구회’를 이끌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방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섰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지와 민생경제, 전략산업, 농정 분야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농업의 도약을 위해 삼각농정과 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박용근 의원(무소속)은 전북 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들 우수의회정 대상 수상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상식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진성 기자

##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 최훈열 도의원 발의 건의안 임시회 채택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이 25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990년대 150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6년 92만 톤까지 감소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졌다”면서 발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남획, 육상 오염물질 유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전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도내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이 확대 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대표발의)·송지용·두세훈(공동발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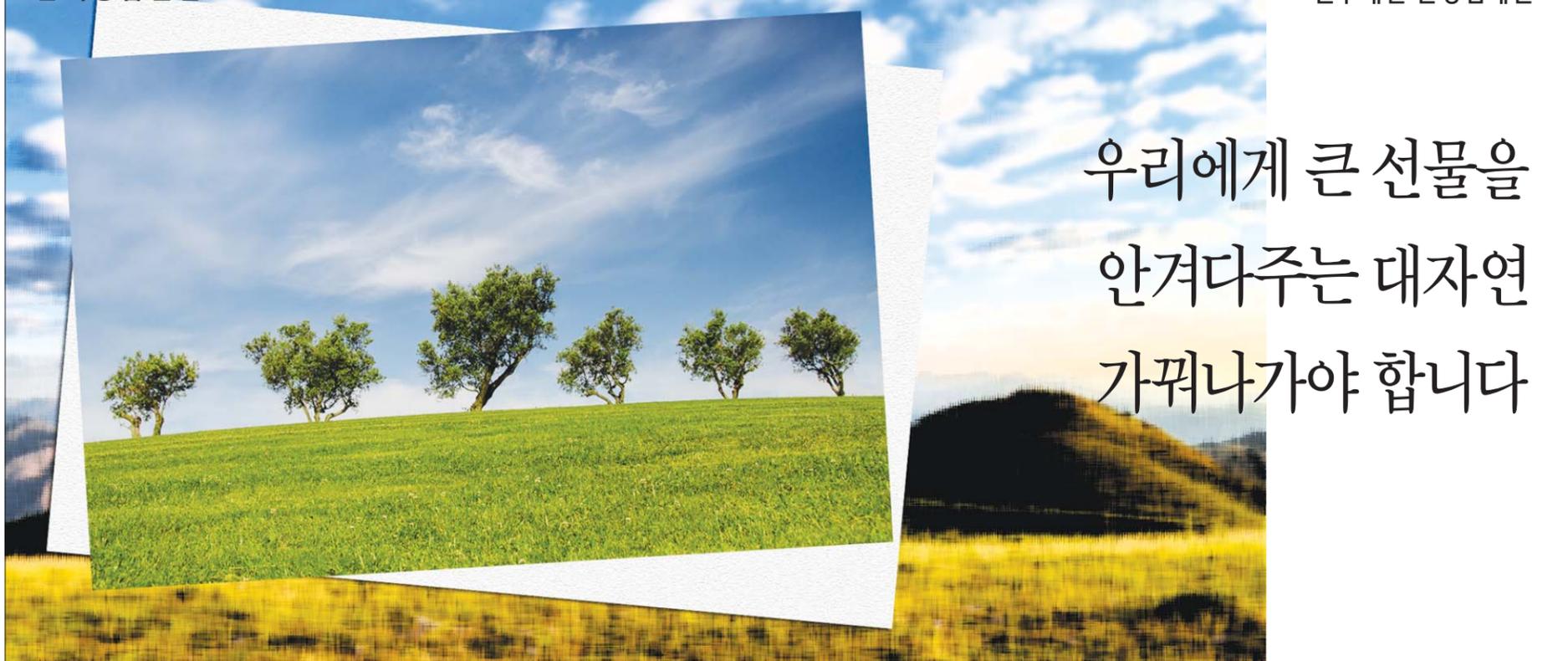
김이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에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업’ 분야를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해 조성한 시·군의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14개 시군이 2008년부터 해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해 2019년 말까지 103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한 백 종합건설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